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책임 강화” VS “유기 증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 거둬 동물복지 예산 활용 정부 검토 방침 찬반 논란 점화 기존 도입 정책·제도 정비 요구 “성숙한 반려인 문화 정착 우선”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는 정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재점화됐다.

반려인구가 1500만명에 육박하면서 동물 유기, 관련 복지 시스템 미비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어서다.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27만1000마리로 총 누적 등록 개체수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328만6000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유기·유실 동물은 11만3072마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지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예산은 2018년 200억 4000만원에서 2023년 373억8512만원으

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려동물의 유기·유실 증가로 관련된 세금 부담이 커지자 이를 반려인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거둬 이를 동물병원 의료보험 등 동물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반려인의 조건을 강화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유기 동물의 수를 줄이는 등 동물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0년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당시 반려동물 보유세를 포함했다가 반려인들의 반발과 일부 비판 여론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간 바 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차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도입과 관련해 “보유세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많기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시민들 사이에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유세 도입을 찬성한다는 입모(23)씨

는 “유기 동물 보호·구조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등 동물 복지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오히려 반려인에게 부담감을 줘 유기·유실 동물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살 반려견 제리를 키우고 있는 반려인 장모(29)씨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앞서 기존에 마련된 정책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씨는 “반려동물 보유세 적용 대상조차 모호한 상황이라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걷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전에 도입한 반려동물 등록제 등을 통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도입에 앞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철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육더펫하우스협동조합 대표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세 제도를 도입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당장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반려인들에게 오히려 거부감

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사전에 예산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하게 해외 선례를 들여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반려문화의 정서에 맞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유기 동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유세 부과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을 유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반려인 적격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성숙한 반려인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성아 기자



탄소중립포인트제 우수아파트 시상 광주 임택 동구청장이 5일 접견실에서 탄소중립포인트제 평가결과와 우수아파트 시상식을 갖고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400세대 이상 최우수상에는 진아리채차 1차, 300세대 미만은 명지로드힐포레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주 동구 제공

‘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살인예비 혐의 “기억 안난다”

자신의 신변을 비판하며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30)이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

장 김용규)는 5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 26일 오전 0시 40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변 인기척까지 확인한 뒤 10대 여학

생 A양의 뒤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박씨는 범행 1차 범행 이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2차 범행을 목적으로 홀로 영업을 운영하던 여성들만 골라 술집에 들러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의 방식으로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재판이 열린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살인예비 혐의와 관련해선 2차 살인을 목적으로 대상을 물색했는지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알지 못한다. 기억이 안난다. 변호인과 상의하고 진술하겠다”

는 취지로 답한 게 맞냐고 박 씨에게 묻자 박 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의 유가족과 친구들은 “엄중한 처벌로 정의 구현을 바란다. 재범 위험성을 볼 때 박대성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성의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민현기 기자

무안-도교 진에어(JIN) 정기편 취항 확정!
도교온천여행 2박 3일
1인기준 699,000~

JIN AIR 문의/예약 : 1522-1901

*해당 상품은 출발일마다 요금이 상이합니다. ▶ 포함내역 : 항공 및 유류세TAX, 호텔(2인1실), 차량, 가이드, 일정상의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2억원 여행자보험 ▶ 쇼핑 : 1회 (면세점)
▶ 불포함 내역 : 기사 & 가이드팁(1인 ¥ 3,000), 매니팁, 싱글차지(2박/15만원), 국내수송, 기타개인경비, 여권(여권의 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종합여행업 기획여행신고(2억원) 100-000-2024 0474 4822 호 ▷ 관광사업자 등록 제2008-000001호 ▷ 사업자등록 410-81-73451 (주)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